

1-1 대구경북통합신공항**Q.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은?**

-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·민 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최초 사례로, 군공항 건설은 「군공항이전법」에 따라 국방부·대구시가, 민간공항 건설은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라 국토부가 추진 중
 - '23.4월 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」 제정('23.8월 시행) 이후, 민간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('23.10월)하고, 현재 기본 계획 수립('23.12월~, 1년간)을 추진 중임
 - 군공항은 '23.11월 국방부-대구시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대구시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정하고, 현재 대구시가 사업대행자(SPC) 구성을 추진 중임
- 민항 건설사업은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, '25년에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,
 - 군공항 건설사업과 일정을 맞춰 개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

Q. 대구시 사업대행자(SPC) 구성을 위한 공공기관 참여는?

- ☐ 대구시는 군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대행할 SPC 설립을 추진 중
- ☐ 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」 제14조에 따르면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, 「공공기관운영법」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, 공공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정하고 있음
 - 이에 대구시는 대구도시개발공사, 대구교통공사, 경북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과 함께 도시개발과 공항개발에 전문성을 지닌 LH와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이며, 민간참여자를 위한 공모계획도 마련 중임

1-2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

Q.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관련 향후 계획은?

- ☐ 현재 대구시가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의 경제성·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 중에 있으며, 민간 사업자가 정해지면 이를 국토교통부에 제안할 것으로 예상
- ☐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하면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음
 - 특히, 민간사업과 관련한 법정절차인 적격성 조사,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음

①-③ 국가로봇테스트필드

Q.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은?

-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은 2023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상세기획 과정을 거쳐 2024년 2월 사업공고가 완료되었음
 - 사업관리기관이 3월 중 총괄수행기관 및 수행기관 평가과정을 거쳐 4월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며, 2028년까지 추진 예정
- 2024년~2025년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실증 시설을 설계하고, 2026년까지 주요 실증연구 시설물 준공을 완료한 후,
 - 2027년 시범운영을 통해 2028년 본격 실증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임

<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주요 추진 일정 >

- * (건축설계) 설계공모('24.4~9) → 기본·실시설계('24.10~'25.10)
- * (건축공사) 시공사 선정 및 착공('25.11) → 준공('26.12)

①-④ 대구 수성알파시티

Q.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현실성 있는 목표인지?

- 대구 수성알파시티는 '14년 970억원의 정부 투자로 시작하여, 현재 243개 SW기업이 입주를 확정 한 비수도권 최대의 SW기업 집적지로 성장 중임
 - DGIST·경북대·포항공대·계명대 등과 높은 수준의 산학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고, 디지털 전환 수요처인 영남권 주요 국가산단과의 접근성이 좋아 디지털 생태계 거점으로서 우수한 입지 조건임

- 아울러 DGIST의 대학원 중심 제2캠퍼스((가칭)ABB 글로벌 캠퍼스) 구축도 논의 중이며, 이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국제공동연구 및 인력양성 기능도 갖출 예정

- 대구시의 장기적인 비전하에 정부가 충분한 지원 노력을 기울인다면, 향후 지방시대의 랜드마크로 성장 가능할 것임

1-⑥ 기회발전특구

Q.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향후 추진 일정은?

- 기회발전특구는 중앙의 일률적인 공모일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, 지방정부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 가능함

* (지정절차) 지방정부(시·도지사)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입지 선정 및 특구계획 수립 → 산업부에 지정 신청 → 지방시대위원회 심의·의결 → 산업부 장관이 지정

- 현재 각 지방정부는 투자기업을 유치하고,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정 신청을 위한 준비 중임

- 관련 지침이 오늘(3.4일)부터 시행됨에 따라 준비된 지방정부의 지정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

* 「기회발전특구의 지정·운영 등에 관한 지침」(산업부 고시) 시행(3.4~)

2-1 대구 동성로 관광특구

Q. 관광특구 지정 효과는?

- 대구 동성로는 약령시, 전통시장, 근대골목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고, 뷰티·패션·보석·기념품 등 쇼핑과 숙박, 먹거리, 사후면세 특화거리 등 관광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음
 -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구시가 동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상품화하여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,
 - 국내관광객 뿐만 아니라 외래관광객 유치 등 대구관광활성화를 통해 고용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*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
- * 관광특구 지정 효과 : 지역 경제상황 평균 5.5% 향상('23, 문광연 연구)

Q.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?

-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등에 규제 완화 및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
- 주요 사항으로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에 한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지원하고, 공개공지(공터) 사용,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, 옥외광고물 허가·신고 완화, 카지노 허가 완화, 영업제한 미적용 등이 있음
- 또한 문체부에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공모를 통해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(1억원 내외)

Q. 관광특구 지정 절차는?

- 관광특구 지정을 원하는 시·도지사는 문체부에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문체부에서 외국인 관광객 수 등 법령 기준*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한달 이내 시·도지사에게 협의 의견을 통보하면 시·도지사가 관광특구를 지정**함
 - * 지정요건 : ① 외국인 관광객 수(최근 1년간 10만명 이상, 서울은 50만명) ② 관광인프라(안내, 숙박 등) ③ 토지비율(非관광 목적 토지 10% 이하) ④ 지구 분리 금지
 - ** 지정절차 : 시·군·구의 장이 시·도지사에게 신청 → 시·도가 문체부와 사전 협의(30일 이내 협의 의견 통보) → 시·도지사가 관광특구로 지정
- 현재 대구시에서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준비 중*이며,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의해 나갈 예정임
 - * (대구시) 특구지정 연구용역 및 자료조사, 사전협의 신청(~'24.6월) → (문체부) 검토의견 통보('24.7월) → (대구시) 관광특구 지정('24.7월)

②-② 문화예술허브 조성

Q.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?

- 현재 대구지역 문화예술 허브 조성을 위한 기획을 진행하고 있음
 - 기획이 완료되면 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, 2025년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

Q. 문화예술 허브 조성에 관한 기획내용은?

- 국립미술관, 국립뮤지컬컴플렉스 배치계획 등이 포함되어있음
 - 아울러 비용 산정, 편익 추정, 경제성·정책성 분석 등 기본적인 타당성도 검토됨

Q. 대구지역의 구체적인 입지는?

- 옛 경북도청 부지를 대상으로 기획이 진행되고 있음
 - 지역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겠음

Q. 예비타당성조사제도란?

- 예비타당성조사제도란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임
 -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가 정책성, 지역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, 이를 통해 세부 사업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함
 - 재정지출 500억원 이상인 문화 및 관광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며, 대구지역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음

2-③ 국립 구국운동기념관

Q. 국립 구국운동기념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?

- ☐ 대구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위기마다 구국의 정신을 발휘한 역사가 이어져 온 지역임
 - 국권회복운동의 한 획을 그은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며, 6.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곳임
 - 또한, 4.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대구 2.28 민주운동이 일어난 곳이기도 함
- ☐ 국가보훈부는 구국의 정신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안을 마련토록 하겠음

Q. 국립 구국운동기념관이 예비타당성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는지?

- ☐ 사업의 구체성이 정해지지 않은 현 단계에서 예비타당성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
- ☐ 다만,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이 되는 경제성, 정책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보훈부와 대구시 양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
 - 보훈부와 대구시가 국·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구상 단계부터 대구시와 대구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

Q. 대구만 구국의 역사가 있는지?

- 다른 지역도 구국의 역사가 있겠으나 대구의 경우 근현대사에서 터닝포인트가 된 독립-호국-민주 역사를 갖고 있음
 - 국민 대부분이 참여해 국권회복의 한 획을 그은 국채보상운동
 - 6.25 전쟁 당시, 전세 역전의 된 낙동강 방어선 전투
 -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.28 민주화 운동

Q. 국립 구국운동기념관의 향후 추진 일정은?

- 국가보훈부에서 추진 중인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은 3월에 업체를 선정하여 6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임
-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비를 추산할 수 없지만, 대구시에서 요청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, '24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임

2-4 지역 공교육 경쟁력 강화

Q.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.0 선정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?

- 자율형 공립고 2.0의 경우 기존 자공고와 달리 지자체 뿐만 아니라 대학·기업·법인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, 이를 기반으로 교육혁신 모델을 마련·운영할 수 있음
 - 특히 협약기관과 학교가 ‘협약운영위원회’를 구성하고,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등 협약기관이 주도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
- 아울러, 특별교부금을 통한 재정지원(연 2억원), 자사고·특목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, 정원의 100% 교사 초빙 및 산학겸임교사 임용 등 각종 지원·특례를 적용할 예정임
 - 교육부는 대구지역의 자율형 공립고 2.0 선정학교 모두가 지역의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

Q.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.0 지정 이후의 관리는 ?

- 올해 선정된 학교는 ‘시범운영’ 학교로 지정되어, 컨설팅을 통해 협약내용, 교육과정을 비롯한 학교 운영 전반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
 - 지정된 학교는 5년 간 지정되고, 재지정평가 시 취소도 가능하며, 이와 별개로 매년 학교 자체평가를 통해 운영실적을 점검함

Q. IB 프로그램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지?

□ IB 프로그램의 장점은 탐구·토론 중심 수업과 체계적이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며, 수십 년 간 신뢰성을 인정받아 전세계 160여개국 5,600여개 초중고에서 도입 운영 중에 있음

○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은 IB의 수업·평가 시스템은 공교육 혁신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고,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음

* ('19~) 대구·제주 → ('23) 경기·전남 확대 → ('24) 서울·인천·충남·전북 도입 예정

Q.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지역 공교육 혁신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?

□ 실제로 대구와 제주는 2019년부터 IB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공교육 혁신을 시도하고 있음

○ 수업과 평가가 연계된 교실 수업이 개선되었다는 현장 의견이 많고, 특히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IB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□ 다만, 모든 학교에 IB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며, 교육청 단위에서 수업과 평가 혁신을 위해 자발적으로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고, 일반 학교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

3-① 팔공산 국립공원

Q.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의미는?

- 2013년 무등산, 2016년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7년만의 국립공원 지정으로서, 자연생태계 보전과 국민행복을 중요 가치로 삼는 현 정부의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음
- 또한, 뛰어난 자연·경관·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대구·경북의 유서 깊은 진산(鎭山) 팔공산을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으로 승격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음
- 아울러,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고려하여 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,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양적·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

Q.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?

- 팔공산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종은 5,296종으로 23개 국립공원 중 8위 수준, 자연경관은 77개소로 7위 수준, 역사·문화자원은 92점으로 2위 수준임
 - (생태) 붉은박쥐, 수달 등 멸종위기종(15종) 포함, 5,296종 서식 [8위]
 - (경관) 갯바위 등 기암(10개소), 산봉(39개소) 포함 77개소 분포 [7위]
 - (문화) 국보 2점, 보물 25점 등 92점 분포 [2위]
 - － (국보)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(제14호), 아미타여래삼존 석굴(제109호)
 - － (보물) 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(제243호) 등 25점

Q.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?

- 그간 팔공산은 정삼부 능선을 따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로 이원화된 공원관리가 이뤄졌으나, 이제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됨
- 앞으로 자연자원 모니터링, 훼손지 복원,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, 문화유산지구 정비 등 팔공산의 자연·문화·역사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게 됨
- 도립공원 당시 조성되어 노후가 심한 시설의 전면적인 개선과 다양한 탐방·체험 인프라를 조성하여 탐방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생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
-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전후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,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약 1.9배 상승, 탐방객 수는 약 36% 증가할 것으로 보여짐(現 358만명→486만명)

Q.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?

- 본격적인 국립공원관리가 시작됨에 따라 노후가 심한 주차장, 화장실, 탐방로 등의 공원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하고,
 - 저지대를 중심으로 야영장, 자연학습장 등 다양한 탐방·체험인프라를 조성하여 탐방객들에게 고품격 생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
 - 아울러, 국립공원 내 마을을 대상으로 특산물 개발과 마을 수익시설 조성, 체험프로그램 개발,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‘명품마을’ 제도를 운영할 계획임

3-2 대구 서북부 악취 개선

Q. 평리뉴타운 악취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대책은?

- (도심산단 악취) 지난 2020년 평리뉴타운 인근 염색산업단지에 대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, 후속 조치로 악취배출사업장에 악취·대기 개선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집중 지원하였음
- (실태조사) 악취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산단내 악취배출시설 및 주변 영향을 집중 조사·분석('20년)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, 이를 반영하여 대구시 및 사업장에서 악취저감 조치*를 이행 중임
 - * 방지시설 개선 집중 지원(135개 사업장, 534억원),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(6개소) 등 악취 모니터링 강화, 방취림 조성 등 악취 저감조치 이행 중(대구시)
- (방지시설 설치 지원) 광역단위 대기개선사업을 통해 노후 방지시설 교체 등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집중 지원*하고 있음(135개 사업장, 534억원)
 - * (효과)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87% 저감, 산단 주변 대기질 개선(초미세먼지 24% 감소) 등
- (향후계획) 대구시와 협력하여 노후 방지시설 교체를 지속 지원하고 악취 모니터링 확대, 기술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.

Q. 하수도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해결책은?

- 하수관로 정비·관리를 위해 하수관로 및 맨홀, 토구 등 시설개량과 관로 내 퇴적물 준설 등을 통해 하수 악취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임
- 현재 대구시 추진중인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3개소(신규 5, 계속18)이며, 총사업비 규모는 6,162억원임(국비 2,188억원)

Q. 스마트 하수 악취 관리체계란?

- 악취 발생, 배출원에 대한 실시간 측정, 모니터링 및 저감사업 추진을 통한 적극적인 악취 관리 및 대응할 수 있는 체계임
- 달서천 및 서부처리구역, 신천 및 팔거천 유역 내 주요 악취 발생 지역에 대해 발생원인, 유형 등을 파악하고,
- 악취저감시설, 계측기 설치,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ICT 기반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을 구축 중임

Q. 염색산업단지 이전 계획은?

- 지난해 12월 28일 대구광역시는 대구염색산업단지를 2030년까지 조기 이전 할 것을 발표하였음
- 기존에는 2032년 이전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, 행정절차 단축을 통해 이전을 실현하고자 함
- 현재,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대구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친환경 탄소 중립 산단 전환 및 고부가가치형 섬유산업 전환으로 국내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첨단섬유산업단지 조성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임
- 산단 이전 예정지로는 군위군으로 약 50만평이 규모이며, 사업비는 5,500억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추산됨
- 산단 이전으로 서·북부 지역의 염색산단 악취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